

성차별구조 강화시켰다

이혜경 씨 박사논문서 주장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은 성차별을 해결하려는 양성평등적 시각이 결여된 채 기존의 가부장제적 사회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여 여성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저임금 노동에 동원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혜경(피어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씨가 94년 2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사회주의 여권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탁아정책이나 육아휴직 등의 노동복지정책은 값싼 여성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이며 동시에 노동력 재생산의 장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하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성-생산 대 여성-재생산'이라는 이분법적 사회구성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재생산 영역에 한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여성을 생산영역으로 이끌어내려는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우



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은 전통적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가족유지적 정책은 노동력 재생산에 유리하고 전체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

사회복지 정책이 안고 있는 불평등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여권론(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을 분석한 이 논문

정책은 1970년대까지 윤락여성, 미혼모 등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성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좀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남녀고용평등법(1987),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등 일련의 여성관계법의 제정을 통해 외형적으로 여성복지정책이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은 법제가 미비하고 그 실효성도 낮은 실정.

이 논문에서는 성차별을 구조화 시키고 있는 현행 여성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61년 제정된 이후 단 한번의 개정도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여성의 독립연금법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제시했다. 또 '가정과 일터'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기혼여성을 위해 탁아소 확충과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업무를 사회화하고 외병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